

국회의원 장혜영·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담당 :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6 welabtax@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재벌대기업에 거둬지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날 짜 2023. 02. 21. (총 7 쪽)

보도자료

재벌대기업에 거둬지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일시·장소 : 2023.02.22.(수) 오전 09시40분 국회 소통관

1.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됨. 20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임.
2. 이는 모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내용임. 그런데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19일 법안을 제출함.
3.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4.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음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 장혜영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논의 종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발언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에 거둬지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2. 22.(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문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발언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지금부터 장혜영 의원실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반도체법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황당한 '반도체 특혜법'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한 조세제한특례법의 얘기입니다.

'소소위'의 밀실야합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됐던 것도 문제인데,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의 한마디에 화들짝 놀란 기재부가 8%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강그리 뒤집어서 15% 상향안을 다시 내놓은, 자기부정의 '끝판왕' 같은 법이 기재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 정부 측은, 지금이 반도체 전쟁 중이라는 당연한 얘기 외에 이 황당한 특혜법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이나 논리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15% 상향안 자체가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결론만 내리꽃은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15% 상향안은 세법 개정의 기본인 세수효과 측정부터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2년간 4조 3천억, 이후 매년 1조 원의 세수가 감면된다는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예측치의 근거가 기업의 회계자료가 아닌 설문조사 자료라는 점입니다. 설문 대상 안에는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포함됐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문 자료로 도출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혈세를 몇 조씩 들이부을지도 모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기재위가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전체 세수 감소액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투자액의 비율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가운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감면액의 비중도 알지 못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감면액 귀착 규모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요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 납세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도 정부도 아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장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해줄 수가 없다는 '윤석열식 법치주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 것은 사측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식 법치주의는 삼성과 SK 앞에서 쪼그라드는 모양입니다.

기업 회계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실효세율 역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재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는데도 삼성전자의 2020년 실효세율이 21.5%라며 TSMC의 11.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비교하기 어렵다는 삼성전자와 TSMC의 실효세율을 대통령실은 어떻게 알고 자신감 있게 비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재부의 황당한 제도 운영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2021년 하반기 투자액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신고를 통해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반년이 지나서야 기재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는 바람에, 사실상 어떤 기업도 반도체 세액공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유인 효과도 증명된 바 없고, 경쟁 기업과의 실효세율 비교 자료도 없고, 세수 효과도 정확하지 않으며, 심지어 단 한 번도 공제가 이행된 적이 없는 마당에, 공제율을

6%에서 8%로, 8%에서 15%로 두 번 상향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당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대외환경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 특혜 감세라는 윤석열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황당한 세법 개정엔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듯한 토론을 했지만, 회의록에 남지 않고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 밀실야합 안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감세안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앞에서는 이 법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에 조력한다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기업 감세 앞에 한통속이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세수 감소를 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기업 특혜 반도체 법안'을 이번 기재위에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반드시 함께 막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끝.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오늘 저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재부는 2023년 1월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인상하자고 합니다.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합리성이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먼저 절차와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입과 경제환경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공제율 8%를 제안한 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2년 7월 21일입니다. 공제율 8% 인상안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하였고, 그 후 부처 협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여 기재부 제안대로 조특법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때가 정부가 새 제안을 하기 바로 열흘 전인 2022년 12월 23일입니다. 국회 논의 당시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기재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해서도 8% 공제율이면 충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확대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 공제율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 개정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때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게 입법이 된 것인데 기재부는 불과 3일 만에 개정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8% 지원안을 15%로 인상하자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법을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아무 때고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은 국가 재정수입의 근본과 골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조정되어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런 세법이 이렇게 조변석개하듯이 개정될 수는 없습니다. 세법은 기재부가 마음 먹은 대로 그 때 그 때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8% 인상안이 세제발전심의회 논의, 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방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공제율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기재부 스스로 세수 부족을 염려하여 그 이상의 확대는 곤란하다고 방어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입법된 개정안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 하나로 8%에서 15%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지시가 있다면 책임지고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재부의 소임입니다. 기재부는 모든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부처가 아닙니다. 만약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존치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 면에 있어서의 부적절성입니다. 기재부 스스로 밝혔듯이 8%의 투자세액공제도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세제지원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제지원을 받지 못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듯이, 투자세액공제율의 증가도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만약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단지 특정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만을 주는 결과일 뿐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종전 6% 공제율만으로도 1조 9천억 원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조특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6%에서 8%로 인상되면 그 감면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만약 15%로 공제율을 인상하면 삼성전자는 1년에 4조 7천억 원의 세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SK하이닉스의 감면액도 1조 8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약 6조 원의 세금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에게만 몰아서 혜택을 주는 결과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세금인가요? 그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있더라도 한다면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이 투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투자세액공제로 인한 투자 효과도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투자 효과는 없이 두 기업에게만 무려 국민 세금 6조원을 지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 이런 특혜를 두 기업에만 줘야 하나요? 그런 특혜를 받아 온 기업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려 왔나요? 오히려 늘어난 기업 수익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하고 주주배당을 늘리고, 사내 유보만 늘려오지 않았나요.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누군가가 더 낼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돈이 없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줄이기만 해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행정부와 기재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서민들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정부인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정부인지. 끝.